

“대광법 제1조 목적부터 고칠 것”

민주 이춘석 의원, ‘특별자치도 대도시권 포함법’ 대표 발의... 법 개정논의 본격화 전망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이어진 대광법 개정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대광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07~2025년)을 세우고 대도시권에 177.5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왔다.

반면,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어 광역교통망 계획에서 소외된 전북도, 강원도 등 일부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대도시권과의 개발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 이



에 지난 1월 전라북도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과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독자 권역인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바 있다.

이춘석 의원은 광역교통만 관련 계획과 지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는 차별적인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역 간의 조화로운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적을 추가시켰고,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역교통시설

지원에서 제외됐던 전북특자도가 대도시권에 포함되어 지역 교통 불편 해소 및 산업·물류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발의되었거나 논의가 진행 중인 대광법 개정안들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의를 변경하거나 특례 조문을 신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유사 규모 도시 간의 형성성 등의 문제로 기재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례 조문을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특례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발의한 여러 대광법 개정안들을 모두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광법 개정논의를 시작으로 오랜 시간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심해진 ‘전북 홀대’를 깨부수고 국가균형발전의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자치도에 지역 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강원 강릉시)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에, 위성근(제주 서귀포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북지역의 김은덕·박희승·신영대·안효영·윤준병·이성준·이원택·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도 윤준근·정준호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오랜 기간 대광법에서 제외돼 지원 받지 못했던 전북의 서러움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해소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가 열린 2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전북 간첩 망언’을 비판하는 손피켓이 걸려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도의회 “국힘 ‘전북 간첩’ 발언, 천박함의 극치”

본회의서 김성수 의원 발의 사과 촉구 건의안 채택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터져 나온 ‘전북 간첩’ 망언에 대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공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가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서 25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천박의 극치 보여준 ‘전북 간첩’ 발언 규탄 및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전라도를 비하하는 행태는 종종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집권여당의 전당대회에서 간첩으로 매도하는 망언이 있었던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번

‘전북 간첩’ 망언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천박한 배설’로 비판받는 것도 지역 비하의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난 50년 간의 현대사는 차별과 소외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도민 전체를 간첩으로 매도하고 조롱하면서 서슴없이 정치적 망행을 일삼는 것은, 전북을 고립된 섬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넘어서 아예 제거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는 게 도의회의 중론이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성수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망행을 진행자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며, 꼬리자르기를 해서는 안된다.”라면서, “진행자의 단순실수라고 해도 공당의 전당대회에서 벌어진 참사인 만큼 함흥훈 신임 국민의 힘 대표가 공식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전북 간첩’ 망언을 정치적 망행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함흥훈 신임 국민의 힘 대표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전라도 비하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재발방지책 요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지역갈등 부추기는 도민 가스라이팅 중단하라”

‘국힘 소속’ 이수진 도의원 당 전당대회 전북 폄하 관련 “오해 소지 있는 발언 부적절 실망하신 도민께 사과”



국민의힘 소속인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5일 오전 10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 열고 “민주 당에서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KBS 전 아나운서인 김병찬 사회자와 광주 MBC 출신 아나운서 양종아 광주 부구를 당협위원장이 사회 도중 전북도민에 대한 폄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한 지역 국회의원과의 아젠다 소속 도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지난 24일 오전과 오후에 잇따르자 이에 대한 반박 성격의 기자회견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은 부적절했기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망하신 도민들에게 사

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고, 행사 중에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당은 사실을 왜곡해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도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가스라이팅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도민을 위한 민생 보듬기와 지역발전 행거기에 더욱더 매진하고 있다.”고 하며, “특히 장마철 호우피해 복구에 도민과 한마음으로 땀 흘리며 정부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도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념하고 도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 즉각 반응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이 의원의 사과 브리핑과 관련, 도민들은 이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전북을 따로 떼어서 내놓는 자식 마냥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며, 분개해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새만금신항 국가무역항 지정절차 추진을”

나인권 도의원



하와 새만금신항의 신산업 창출 기회 박탈로 이어져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만금신항이 신규 국가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조속히 지정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신항은 현재 2026년 개항을 목표로 한창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지정 신청을 할지, 인접한 전북 유일의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 신청을 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북만 유일하게 국가관리무역항이 단 한 곳에 불과하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최소 2개소 이상의 국가관리무역항을 보유 중이어서 전북 입장에서는 새만금신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신규 지정될 경우 군산항과는 별도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나 의원은 “현재 군산시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지정하려는데, 그 이면에는 새만금신항을 군산 관할권으로 주장하려는 의도가 있다. 만약 새만금신항이 군산항 부속항으로 전락해버리면 군산항의 경쟁력 저

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행정절차만 놓고 볼 때 무역항 지정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안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북자치도는 무역항 지정에 대한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당장 무역항 지정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차후 20년 개항은 물론 정상적인 항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자체 간 새만금신항의 관할권 문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으로, 전북자치도는 도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새만금신항이 15번째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여성사 연구 체계화... 기록된 역사로”

박용근 도의원



사 연구를 위한 공식기록과 비정통적 자료 수집, △전북여성사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여성사 연구 주장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여성사 연구 전반에 관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데 반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정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여성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얼마 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됨으로써 여성사 연구 추진에 첫걸음을 내딛었다고는 하나 도 차원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의 요지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 여성사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서 △전북여성사 발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여성

움 조성, 그리고 △전북여성사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끝으로, 박용근 의원은 “전북 여성들은 당당한 역사적 주체로서 선명한 족적을 남겨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채 정막 뒤의 역사로 남아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전북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서 기록된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바이오특화단지 미지정, 반면교사 삼아야”

정종복 도의원



대응을 통해 세계시장을 점유할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특화단지 지정을 2년 후로 미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정부를 꼬집었다.

정종복 의원은 또 이번 공모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협조체계구축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2년 후 있을 오가노이드 분야 재공모에는 김관영 지사의 개인플레이가 아닌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23일 신정동 연구기관 5개소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방문은 제9대 후반기 정읍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연구시설의 현황 청취와 견학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농축산물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방사선 소재부품정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각 기관별 연구시설을 살펴 보며, 운영현황과 주요 연구사업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였다.

박일 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연구에 전념하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정읍에 더욱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회, 후반기

현장 의정활동 본격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23일 신정동 연구기관 5개소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방문은 제9대 후반기 정읍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연구시설의 현황 청취와 견학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 농축산물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방사선 소재부품정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각 기관별 연구시설을 살펴 보며, 운영현황과 주요 연구사업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였다.

박일 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꾸준히 연구에 전념하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정읍에 더욱 많은 기업이 유치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립길